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4년 1월 (제754호)

- ▶ 전월 대비 8.3% 감소(1,085,774건)
- ▶ 금융위, 공정위, 광주, 충북, 울산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 2월 민원예보로 '화재 안전'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및 전통시장 등 화재 안전 방안 마련 등 제시

국민의 소리

No. 754

월간동향

2024년 1월

01 민원 동향(1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02 기관별 동향(1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03 민원예보(2월) : 화재 안전 10

01 | 민원 동향(1월)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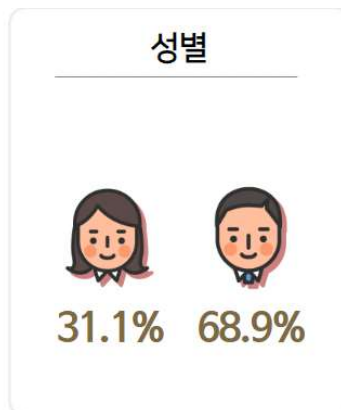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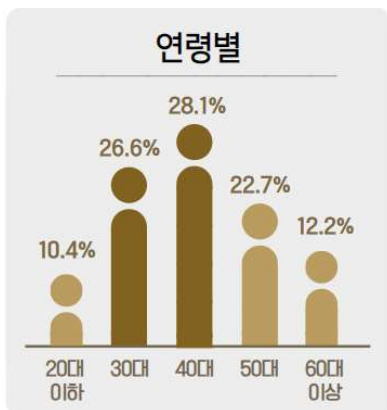
- 2024년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5,774건**
- 전월(1,184,395건) 대비 8.3% 감소, 전년 동월(983,428건) 대비 10.4%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서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4.2.2. 10시)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28.1%) 및 30대(26.6%), 성별로는 남성(68.9%)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19.6%), 30대 남성(18.5%), 50대 남성(16.0%)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00,090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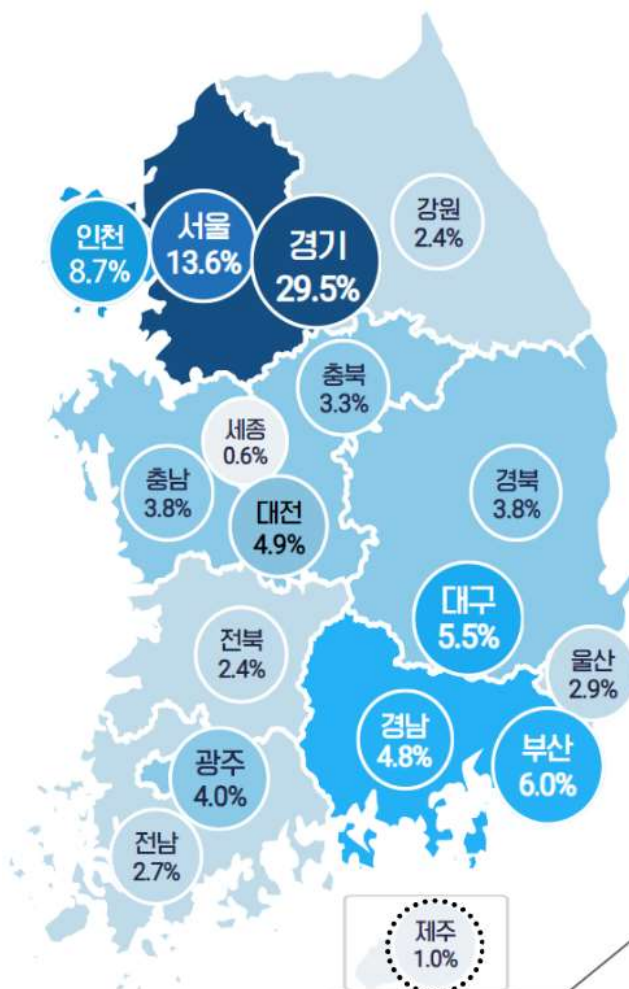
01 | 민원 동향(1월)

지역별 현황

- 경기 29.5%(270,892건), 서울 13.6%(125,055건), 인천 8.7%(79,534건), 부산 6.0%(55,231건), 대구 5.5%(49,989건) 등의 순
-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3%↑)

* 장애인 및 친환경차, 소방차전용 구역, 인도, 모퉁이, 밤샘 주차 등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 증가

11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민원키워드

자동차 교통위반
소방차전용구역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폐기물
가로등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민원발생 현황



※ 신청지역이 확인된 917,054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01 | 민원 동향(1월)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6%)가 가장 많고, 행정·안전(6.6%), 도로(6.0%), 주택·건축(3.6%), 환경(3.1%), 산업·통상(2.1%)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행정·안전	도로	주택·건축	환경	산업·통상	경찰·검찰·법원	보건	
64.6%	6.6%	6.0%	3.6%	3.1%	2.1%	1.8%	1.4%	
수자원	방송통신	교육	재정	노동	문화	국방	과학기술	
1.2%	1.2%	1.0%	0.9%	0.9%	0.9%	0.7%	0.7%	
도시	농림·축산	복지	해양수산	체육	세무	관광	외무통일	우정
0.6%	0.6%	0.4%	0.4%	0.4%	0.4%	0.3%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54,260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주택 취득세 문의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세무** 분야 증가



세무
31.9% ↑



노동
29.2% ↑



국방
25.1% ↑



방송·통신
24.3% ↑



해양·수산
7.4% ↑

감소순



산업·통상
26.3% ↓



도시
21.5% ↓



수자원
17.3% ↓



주택·건축
15.9% ↓



교통
11.3% ↓

01 | 민원 동향(1월)

주요 민원키워드

- 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 요구,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 대책 마련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부출입구 개설
아파트 입주지연 보상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위례신사선악취
어린이보호구역
고가도로 건설 반대
제2경인선
아파트 전면 재시공
영통소각장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 광고물	1	불법주정차
2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	2	친환경차 충전구역
3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3	어린이 보호구역
4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4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5	□□시 악취 개선 요구	5	교통법규 위반차량
6	아파트 사전점검 재 실시 요구	6	고가도로 건설 반대
7	영통소각장 폐쇄	7	제2경인선 추진
8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지급 요구	8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9	학군조정 철회 요구	9	GTX 조속추진 요구
10	재건축 조합 임원선거 관리·감독 요구	10	동탄인덕원선 공사 중지 요구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일반

② 시공사가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준공이 연기된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긴급히 현장소장 교체하는 등의 문제로 입주 지연 보상 관련 소통 요구 ⑧ 건설사가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금융 기관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자를 대신 납부 하라는 통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⑨ 입주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학군 지정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없이 밀실 행정으로 변경 되어 철회 요구

도로 교통

⑨ GTX-B 신내역 장차 및 신내역 종합환승 센터 개설 요구 및 GTX-D의 신속한 착공 요구 등

02 기관별 동향(1월)

중앙행정기관

- 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59,998건으로 전월 대비 43.1%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고용부, 국세청 등, 감소한 기관은 경찰청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경찰청	151,975	53,366	-64.9%
국토부	25,241	17,002	-32.6%
기재부	17,467	12,881	-26.3%
고용부	7,855	10,298	31.1%
대검찰청	8,200	8,620	5.1%
국방부	5,893	7,456	26.5%
국민권익위	4,904	5,890	20.1%
식약처	4,688	5,563	18.7%
복지부	2,708	3,136	15.8%
행안부	2,677	3,106	16.0%
국세청	2,176	3,061	40.7%
과기정통부	2,276	2,621	15.2%
공정위	1,544	2,526	63.6%
환경부	2,104	2,276	8.2%
해수부	1,820	2,106	15.7%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금융위	366	812	121.9%
공정위	1,544	2,526	63.6%
소방청	847	1,265	49.4%
방통위	197	292	48.2%
외교부	763	1,125	47.4%
국정원	333	488	46.6%
국세청	2,176	3,061	40.7%
보훈부	510	702	37.7%
고용부	7,855	10,298	31.1%
국방부	5,893	7,456	26.5%
산자부	628	786	25.2%
조달청	590	726	23.1%
농림부	1,118	1,370	22.5%
문화재청	163	199	22.1%
국민권익위	4,904	5,890	20.1%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및 대출 규제 관련 문의 민원 등(82건)

공정위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건 과장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요구 민원 등(495건)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민원 등(395건)

02 | 기관별 동향¹⁾(1월)

지방자치단체(광역)

- 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5,162건으로 전월 대비 4.1% 증가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광주, 충북, 충남 등 8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전북, 경북, 인천 등 9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4.12월	'24.1월	증감률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서울	36,374	39,367	8.2%	충남	473	557	17.8%
대전	5,558	4,959	-10.8%	제주	432	444	2.8%
세종	4,063	4,317	6.3%	전북	442	392	-62.1%
인천	5,568	4,123	-26.0%	충북	274	362	32.1%
광주	1,857	3,550	91.2%	강원	317	325	2.5%
경기	2,491	2,191	-12.0%	전남	304	300	-1.3%
부산	1,630	1,787	9.6%	경남	288	273	-5.2%
대구	1,319	1,152	-12.7%	경북	411	265	-35.5%
울산	807	798	-1.1%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광주 건설사가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이자를 대신 납부 해야 상황에 대책 마련 요구 민원 등(452건)

충북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신고 등(126건)

1) '24.2.2.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02 | 기관별 동향(1월)

지방자치단체(기초)

- 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90,341건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인천 서구,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북 영양군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3,937	25,019	4.5%
인천 서구	11,314	17,537	55.0%
경기 성남시	18,265	17,394	-4.8%
충북 청주시	18,039	16,839	-6.7%
경기 고양시	15,930	16,249	2.0%
경기 화성시	14,177	15,277	7.8%
경남 창원시	13,856	14,777	6.7%
서울 강서구	13,135	13,775	4.9%
충남 천안시	13,076	13,094	0.1%
서울 서초구	13,480	12,975	-3.8%
대전 서구	12,354	12,883	4.3%
경기 안산시	13,004	12,642	-2.8%
서울 송파구	11,319	12,514	10.7%
경기 평택시	11,243	12,167	8.2%
서울 관악구	11,664	12,042	3.2%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경북 영양군	46	120	160.9%
강원 횡성군	247	463	87.5%
경남 고성군	195	331	69.7%
인천 서구	11,314	17,537	55.0%
경북 성주군	135	192	42.2%
강원 양양군	204	288	41.2%
강원 정선군	368	500	35.9%
강원 양구군	104	141	35.6%
전남 장성군	207	275	32.9%
강원 영월군	200	263	31.5%
경북 의성군	290	381	31.4%
광주 동구	2,233	2,933	31.4%
강원 홍천군	503	652	29.6%
전남 진도군	108	139	28.7%
충남 태안군	299	380	27.1%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감 사례]

인천 서구

○○신도시 준공 예정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구분 관리 운영 요구(6,794건)

경북 영양군

장애인 전용구역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등(33건)

강원 횡성군

친환경차 충전구역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등(374건)

02 | 기관별 동향(1월)

교육청

- 1월 교육청 민원은 총 8,334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충남, 울산, 광주, 경남 등 5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대구, 전남, 대전, 서울 등 12개 기관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강원	180	176	-2.2%	세종	75	54	-28.0%
경기	3,891	3,827	-1.6%	울산	86	129	50.0%
경남	263	287	9.1%	인천	302	309	2.3%
경북	245	175	-28.6%	전남	216	99	-54.2%
광주	146	172	17.8%	전북	160	124	-22.5%
대구	521	148	-71.6%	제주	69	58	-15.9%
대전	180	121	-32.8%	충남	222	1,203	441.9%
부산	272	257	-5.5%	충북	149	125	-16.1%
서울	1,573	1,080	-31.3%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울산교육청** 초등학교 돌봄 수용인원 확대 요구 민원(22건) 증가
- 충남교육청** 아산 탕정지역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1,065건) 증가
- 대구교육청** 중리초 통학 안전 확보 요구 민원(338→0건) 감소

02 기관별 동향(1월)

공공기관등

- 1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9,725건으로 전월 대비 12.4% 감소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의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20,682	13,389	-35.3%
금융감독원	3,760	4,396	16.9%
인천도시공사	3,132	3,233	3.2%
한국소비자원	1,934	2,095	8.3%
법원행정처	1,989	1,878	-5.6%
국가철도공단	1,767	1,671	-5.4%
한국전력공사	2,012	1,556	-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74	1,103	-29.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34	1,095	31.3%
한국철도공사	1,046	966	-7.7%
한국도로공사	645	948	47.0%
한국산업인력공단	2,057	868	-57.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03	852	-15.1%
국민건강보험공단	682	757	11.0%
주택도시보증공사	724	746	3.0%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12월	'24.1월	증감률
한국개발연구원	10	499	4,89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79	436	45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	118	35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2	416	128.6%
국민연금공단	111	183	64.9%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68	104	52.9%
한국도로공사	645	948	47.0%
경기주택도시공사	75	110	46.7%
부산교통공사	91	124	36.3%
도로교통공단	109	145	3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34	1,095	31.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34	698	30.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22	143	17.2%
금융감독원	3,760	4,396	16.9%
한국교통안전공단	137	159	16.1%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감 사례]

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물 불량 및 포트홀 신고 등(435건) 등 증가

한국개발연구원

제2경인선 민자적격성조사 조속한 완료 촉구 등(491건) 증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2차 답안 열람 신청 감소(439건→86건)

03 | 민원예보(2월) : 화재 안전

봄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화재 발생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전통 시장, 전기차 충전, 산불 등의 화재 안전 요구 등 민원 급증에 따라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및 화재 안전 방안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민원예보 실시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1.2월~'24.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화재 안전' 관련 민원은 총 74,374건(월평균 2,066건)

- 화재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 증가('22년→'23년 1.31배 증가)

* 화재 안전 관련 민원은 계절성은 없으며, 예방목적의 민원이 주를 이룸

< 최근 3년간('21.2월~'24.1월) 월별 민원 추이 >



○ (신청인) 남성(76.7%)이 여성(23.3%)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32.0%), 30대(29.3%), 50대(18.4%), 60대 이상(10.9%)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32,180건(전체의 76.3%),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7,574건(전체의 37.1%) 대상

○ (신청지역) 경기(34.2%), 서울(18.4%), 인천(6.2%), 부산(6.0%)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64,661(전체의 96.9%),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 (처리기관) 경기(22.0%), 소방청(18.6%), 노동부(3.8%), 인천(3.7%), 경찰청(2.7%) 등의 순

03 | 민원예보(2월) : 화재 안전

2 개선 방향

현재	개선 방향
▲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소방법 개정^{18.8.}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무화 및 주차 등 방해 행위 금지* 실시 - 개정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 - 신고가 적용되지 않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계도만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주택 100세대, 기숙사 3층 이상 건물, 1회 50만원 과태료 부과 ▲ (화재 안전 요구)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등 문제 - (전기자동차 충전) 충전구역이 지하 주차장에 주로 위치하여 화재시 2차 피해 발생 상존 - (산불)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지속적 산불 발생 - (건설현장) 용접시 화재감시자 미 배치 및 불치 방지 시설 미흡 등 ▲ (민간자원 보상 요구)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사용한 민간자원(소화기 등) 보상 미흡(지자체별 보상 범위가 다름) - 초기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을 도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흡	▲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마련) 해당법 소급 적용(확대 등) 방안 논의 필요 - 개정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속 근거 마련 필요 - 인식 개선 홍보 및 자율적 개선 유도 필요 ▲ (화재 안전 방안 마련)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23.8.}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충전설비 방진, 방수, 내화구조, CCTV 설치 등 의무화 필요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 도입, 안전성·화재방지 장착 차량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 마련필요 - 산불 및 건설현장 화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등 인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민간자원 보상 및 포상 확대) 자발적인 초기대응 활성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저감 필요 - 소화기 등 화재에 사용된 민간 자원 보상 지원 범위 확대 - 자발적 초기대응에 대한 적절한 포상 및 대국민 홍보 필요

03 | 민원예보(2월) : 화재 안전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하였습니다. 혹여나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 불로 번질까 걱정됩니다.(‘23.6.)
- 소화전 옆에 주차를 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처리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3.)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차량 신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재진압시 혹은 구조작업 생황에 대야 할 자리에 주차해 놓고 차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너를 도는 쪽에 있어, A필러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23.2.)
- 해당 도로는 소방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여기에 더해 캠핑카 까지 주차하여 갈수록 혼잡하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시 골든타임 무너지고 있는 지역입니다.(‘23.5.)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 ○○시장 안의 노후화되고 널부러져 있는 전선들, 냉각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큼니다. 수 차례 화재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선이라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시장 안 도시가스입니다. 화재시 도시가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상인분들께서 소방선을 지키도록하고 화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노후화된 전선 교체, 냉각기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3.8.)
- □□시장은 지붕공사도 되어있고 화재위험으로 소방점검도 자주하며 화재도 몇 번 난 곳입니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곳인데 담배 물고 지나 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저녁시간 시장 식당에서 술 드시고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시장 통로로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은 안나오더라도 화재위험이나 간접흡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마땅합니다.(‘23.5.)

[전기 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시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 및 장시간의 불길이 발생하면 지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배관이 불길에 노출되어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물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전기충전시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충전설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조해주세요.(‘23.1.)

03 | 민원예보(2월) : 화재 안전

[산불 방지 요구]

- 겨울철이 특히 산불에 더 위험한데 고춧대나 논 태우기 등 신고하지 않고 태우는게 심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등도 같이 태우고요. 그래서 항상 현수막 부착과 단속 부락을 매년 드리는 거 같습니다. 특히 농작물 소각에 관해서는 방법 등 마을에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데 생각 없이 태우면서 자리 비우는 등 위험해 보입니다.(23.12.)
- 등산로 입구나 끝나는 지점에 플랭카드나 산불예방 안내문을 붙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산불 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합시다. 산불 예방에 힘을 모읍시다.(23.4.)
-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22.3.)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 건설현장 작업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소용접 작업중으로 보이는데 소화기도 없고 화재 감시자도 없습니다. 가스통 폭발 위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뒤편이 아파트 단지인데 화재 위험성을 모르는거 같습니다.(23.5.)
- 현장 내 그라인더 사용중 불티방지막 미설치로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주변에 소화기 배치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노동자 안전 걱정이 상당히 우려됩니다.(22.1.)
- 화기, 용접작업시 화기감시자 미배치상태로 작업을하고 화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불티비산방지도 안 깔고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되면서 화재 위험에 사고 빈번히 발생 하는데도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강력한 단속 및 점검 해주세요.(23.5.)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

- 옆 건물 재활용 박스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진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본건물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하였던바 진압이 완료되었고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소화기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에 협조하지 않을까요?(23.5.)
- 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게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게 실망스럽습니다.(22.3.)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11월)	윤영성 주무관		044-200-7330
02. 기관별 동향(11월)			
03. 민원예보(12월)			
04. 국민생각함	유선미 주무관		044-200-7265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